

선박검사와 법적 책임

- 선박검사원을 중심으로 -

이상일* · 유진호**†

* 한국해양대학교, ** (사)한국선급

Ship Survey and Legal Liability

Lee, Sang il* · Yoo, Jinho**†

*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, ** Korea Register of Shipping

핵심용어 : 선박검사, 불법행위 책임, 채무불이행 책임, 국가배상책임, 선박안전법

Key Words : Ship Survey, Tort Liability, Default liability, National liability, Ship Safety Act.



세계 해양의 빛!
한국해양대학교!!



제 1 장 서론

세계 해양의 빛!
한국해양대학교!!

선박검사와 책임 - 선급검사원을 중심으로 -



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

이상일 · 유진호

-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의 인명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
- 검사기관에 의한 선박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책임문제 발생
- 법정검사와 임의 검사로 분류하여 법적 책임을 검증
- 임의검사 - 민법
- 법정검사(정부대행검사의 경우 - 국가배상여부 요건이 해당되는지

- 이 논문의 연구 목적 : **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선박검사원의 검사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- 국가배상?? 선급검사로 손해발생의 경우 - 법적 구제수단???**



제 2 장 선박검사제도의 개념

세계 해양의 빛!
한국해양대학교!!

- 선박검사는 법정검사와 임의검사
- 법정검사는 - 정부대행검사 기관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음
 - ▶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선급, 선박안전기술공단, 프랑스선급에 위임
- 임의 검사는 해상보험의 담보대상으로서 당해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목적
- 정부대행검사를 위임받은 선급에 임급할 경우 중복 검사를 많이 줄일 수 있음



제 4 장 정부대행검사의 법적 책임

세계 해양의 빛!
한국해양대학교!!

○ 선박안전법 제67조

선박안전법 제67조에 **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도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** 다시 말하면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따른 손해가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의 특별법적 규정으로서 선박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구제를 받기가 쉬워졌다.

* First Author : silee@kmoou.ac.kr, 051-410-5099

† Corresponding Author : jhyoo@krs.co.kr